

제3전선, 정보전쟁 민주주의 방어 정보전

중·러 사이버 용단 폭격, 미 국론 갈라치고 국가 시스템 해킹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탈냉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영 간 민주주의 공격·방어전이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중·러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공격이 빈발하고, 이에 서방이 바짝 긴장하면서다. 급기야 최근 들어 서방 정보수장들의 경고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2024년 미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중·러·이란의 여론정보전은 미국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경고했고, 영국 방첩기관 MI5의 켄 맥컬럼 국장은 중국의 민주주의 공격이 '숨막힐 정도'라고 토로했다. 미 국토안보부도 '2025년 국토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러·이란의 민주주의 공격이 앞으로 '전북적·비밀적·범죄적 전술을 혼합'해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밀하게 전개되는 민주주의 정보전의 특성상 공개된 사례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래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윤곽이 보인다.

민주주의 정보전 공방은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사건이 결정적 신호탄이 됐다. 러시아 군정보총국(GRU)이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에 수천 개의 가짜계정을 만들어 대규모 여론공격을 펼쳤다. '평범한 가정주부' 등 일반시민인 것처럼 위장한 네티즌들이 미국의 오랜 국론 분열 이슈인 이민·인종 문제는 물론, 중산층 몰락으로 민심이 흉흉한 동북부 공업지대의 여론을 충동했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게 만들었다. 위장 전위세력을 동원해 여론을 분열시키는 전형적인 민주주의 분열전이다.

러 군정보총국, 미 사회 갈등·분열 충동질

온라인에만 그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달궂진 여론 공방을 거리 시위로 가져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게 하는 위험한 공격도 시도했다. 2016년 5월 21일 휴스턴에서 이슬람을 지지하는 시위와 비판하는 시위가 동시에 개최돼 양측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정반대 시위가 열리도록 기획해 시민들 간 충돌을 유도하는 새로운 공격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격은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 침투해 분열과 혼란을 증폭시키면 상대의 국가운영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국력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민주주의 공격은 방어적 성격이 깔려있다. 서방이 인권·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공산체제 붕괴를 노린다고 의심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 전체가 나서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이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5일을 '국가안보 교육의 날'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어적 수준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이다. 미국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국가 인프라 공격이 그 예다. 중국의 사이버 정보공작팀인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이 2021년부터 미국의 통신·에너지·운송·수자원 시스템 해킹을 시도했는데, 그 목적이 유사시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켜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밝혀졌다. 만약 막지 못했다면 미국은 재앙적 혼란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치인을 포섭해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확보하는 것도 중국적 특징이다. 가령, 2022년 벨기에 상원의원 프랑크 크레이엘만을 포섭해 유럽정치권에서 반미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도록 독려했는데, 이는 포섭한 유럽 정치인을 통해 미·유럽 간 분열의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그룹 '볼트 타이푼'은 2021년부터 미국 에너지·교통·수도 시스템에 침투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그림은 미·중 사이버 정보전을 묘사한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러 수천 개 가짜 SNS 계정 만들어 2016년 미 대선부터 전방위 공세 중, 해킹 조직 미 핵심 인프라 공격

미 등 서방 정부·정보기관 합동 대응 정보 조작 보고서 통해 진실 알리고 가짜 정보로 교란하는 기만전 강화

SNS를 통해 시위용품 제작방법까지 알려준다는 사실까지 알렸다. 또한 싱크탱크와 유력 언론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알렸다. 유사 미디어를 통해 알릴 경우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랜드연구소가 2021년·2022년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전(Disinformation Efforts on Social Media)' 보고서를 연속 발간한 것이 그 예다.

진실 알리기 작전의 관건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당국은 충실히 정보를 수집해 이를 뒷받침했다. 가령 2015년 미 FBI는 대선 1년을 앞두고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서버에서 러시아 해커조직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했다. 이에 영국·네덜란드·에스토니아 정보기관과 협조해 배후에 러시아 정보당국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CIA는 푸틴 대통령이 미 선거 개입 작전을 승인했다는 휴먼트 정보까지 입수해 이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행정부의 손을 거쳐 국민에게 전달돼 진실 알리기 작전의 유효율이 됐다.

북 "이태원 참사 활용 혼란 부추겨라" 지령

기발한 기만정보전을 통해서도 방어했다. 2017년 프랑스 대선 당시 프랑스 정보당국은 러시아 해킹조직에 의한 마크롱 후보 선거자료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프랑스는 가짜 마크롱 계정을 만들어 허위 문서들을 생성시키고 진위가 쉬이 수천 개의 문서들도 가득 채워 넣었다. 해커들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도록 유도하는 역정보전이었다. 프랑스는 이 작전을 통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무난히 막았다.

이처럼 오늘날 양 진영 간 민주주의 정보전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다시 나타난 현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세가 점점 체제공격형으로 변하고 있다. 개방된 민주사회의 여론과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에 불신과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신뢰·양보와 같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반적 가

씨앗을 꾸준히 뿌려 놓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공격에 맞서 서방은 조직 정비부터 나섰다. 우선 정보기관 단독 대응보다 정부 합동 대응 방식을 택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언론·표현의 자유 등 합법적으로 위장해 공격하기 때문에 정보기관만 나설 경우 자칫 민주주의 탄압으로 역공당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대부분 서방 국가들은 미국처럼 국무부·법무부와 같이 행정부가 공식 대응하고, 정보기관이 물밑에서 뒷받침하는 방식을 택했다. 역할 분담을 통한 민주주의 방어 정보전의 진화이다.

다음은 국민에게 '진실 알리기' 전략으로 맞섰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작전이다. 국민이 거짓 선전·선동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해 민주주의가 스스로 내분에 빠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공격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렸다. 심지어



러시아 군정보총국(GRU)
러시아 최고 군정보부대로 냉전시대 KGB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수많은 비밀 정보 활동을 펼쳤다. 지금도 러시아의 중추적 정보 기관으로 꼽힌다.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의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반민주적 이념과 세력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거짓·왜곡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다. 과장된 표현이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는 구분된다.

치를 공격하는 것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부지불식간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무서운 공격이다.

더욱이 디지털시대는 이 같은 공격이 더 예리해질 수 있다. AI를 탑재한 대안 미디어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경우 진위 구분이 어려운 허위조작정보를 더욱 많이, 더욱 빨리,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공격이 더 쉬워지고 더 날카로워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북한 등 외부 공격이 왕왕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북한이 민주노동 인사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 한국 사회를 혼란시켜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법원에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북한의 우리 민주주의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당국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주의 방어는 당국만의 몫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튼튼한 방어벽은 그 사회의 건강성이다. 과거 동독 정보당국이 서독 민주주의를 맹공해도 결국 서독이 승리한 것은 서독 사회의 건강성 때문이었다. 민주주의의 항유자인 국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허용한 자유의 오남용이나 방임에 의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제도다. 그러므로 국민도 민주주의 공격세력들을 눈여겨보고 매섭게 질타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결코 완전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의지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유럽 인권재판소와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다만 정보당국은 안팎의 국가위협 탐지가 고유 임무인 만큼 불안정한 현 정세 속에서도 민주주의 위협세력 탐지에 배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서방 정보기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최성규 국가정보원에서 장기 근무하며 국제안보 분야에 종사했다. 퇴직 후 국내 최초로 비밀정보활동의 법적 규범을 규명한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